# 선거제 개혁, 관건은 '의원 정수 확대'

정개특위 제1소위 개최 여야 4당 '확대' 공감대 한국당 "위헌 소지 있어" 바른미래 "입장 분명히 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날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 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 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위헌까지 거론하며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많은 의원이 방 송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개혁이라고 말씀 하신다"며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 제로,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지 허락을 얻 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우리 헌법을 과 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299석이 한계라 는 전제하에서는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 는 주장도 있다"며 "역대 국회에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 던 과거 경험을 전혀 무시하면서, 마치 (의 원정수확대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소위의) 논의 진척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자면 현실적 으로 의원정수를 늘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 라며 "국민의 반대 여론이 있다면 여야 정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권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헌법상 민주주 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공방이 이어지자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이 벌써 11차 회의이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소위를 연 것"이라며 "이 문 제에 진전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이 자리 에 앉아 있을 이유를 더이상 못 찾겠다"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은 "근본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 대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여 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 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선거제 개혁 에 대해 무조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선거제도가 좋다는 말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

그러자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 원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있고 비례대표로 득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방식도 있다"며 "무조건 여당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 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소위에서 자기

가 주장하는 제도가 선이라고 강하게 주장 하면 논의 구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에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이 냐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20년 간 논의됐다"며 "국회의 논의 결과를 가지 고 중앙선관위가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공식 제안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과 함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해 도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려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공수처 안되면 상임특검제 도입하자"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 원장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 수처) 신설까지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 다며 그전 단계로 상임특별검사제 도입 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위원장은 이 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 옥'이라고 점잖게 표현은 하는데 내심 '이거 만들었다가 우리만 수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다. 그러면서 특 별감찰반법과 상설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은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그래서 저는 상설특 검을 상임특검제, 항상 있는 특검, 기구 특검회를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다"

며 "저는 이것까지는 한국당도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제 가 법사위원장일 때 상설특검법과 특별감 찰관법을 통과시켰다. 그 때 기구특검화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약하다고 반대했지만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돼 이 석수 특감이 임명됐고 결국 우병우 민정 수석과의 갈등, 최순실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실마리가 잡혔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제안을 한국당 측 에 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 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공수처 신설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면서도 "현재 전망은 그렇지만 국민들이 도와준다면 이것도 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 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여 "평화 여정"…한국당 "한미동맹 약화"

여야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 반응

여야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의 중국 방문 소식에 대해 상반된 반응 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 화와 평화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며 환영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와 같 은 이슈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만간 있을 북미정상회담에 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주변국을 상대 로 초당적 의회 외교에 더 큰 노력을 해

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 진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으로서 중국의 후원을 받으려고 방중한 것이라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 이고, 이런 행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 장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그들 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3野 '신재민 청문회·김태우 특검' 추진

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김동연 전 총리 출석 시키겠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8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 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 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 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 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 화당 장병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 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야 3당은 특히 기재위 청문회에 김동연 전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번 사안 관 련 핵심 인사들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활성화돼야 한 다는 차원에서 기재위 청문회가 열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조 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 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 국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5·18민주 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먼저 검찰에게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별 검사 도입 관련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단독으로 특 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얻기 위해 특검 도입에 대해 논의 하겠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수사 가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의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검을 함께 추진하는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할 계획이고,

다음 주초가 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특검에 관해 서만 얘기했고 국정조사에 대해 하지 않았 다"며 "이미 운영위를 한 차례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

청와대 전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 장의 만남으로 불거진 군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방위와 운영위의 연석회의 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 련해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 도록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김관영 원내대 표가 전했다. 이날 회동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함께 행동 하기로 했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정부 평화 구축 정책 적극 지원"

#### 평화특위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 인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 는 당 산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동 북아평화협력특위·한반도비핵화대책특 위·한반도경제통일특위·남북문화체육 협력특위 등 4개 특위가 함께했다.

이 대표는 "분단 70년사가 종식되고 평화체제와 공존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 한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되도록 각 위원 회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기 대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새해 들어 김 위원장의 신 년사와 중국 방문 등으로 한반도평화 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항구 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북아평화협력특위의 송영길 위원장 은 "북미정상회담이 '제네바 합의'처럼 다시 무산되길 바라는 세력을 어떻게 효 과적으로 막아내고 북미 신뢰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 점"이라면서 "남북관계와 한·러·북·중간 의 동북아 상호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을 위해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매매 4억(일시불 조정가)
- 임대보장

문의. 010-6834-7400



